

Issue Report

2025. 04. 20.

자율방범대 충남 맞춤형 업무 발굴

고 승 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선임연구위원
kosh@cni.re.kr

CONTENTS

1. 서론
2. 사회안전환경과 자율방범대 개요
3. 충청남도 안전환경 특성과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4.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사회 안전관리 현안과 추진과제
5. 결론 및 제언



요약

-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이 자율조직하여 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봉사조직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정단체 지위를 형성함
-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리 주체는 시도경찰청에 있으나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지역사회 안전활동 수행이 가능하여 그 역할과 범위에 대한 구체화 필요성이 제기됨
- 경찰사무 지원 중심 업무에서 벗어나 행정 복지 및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주민참여 조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1)스마트 치안기술 대응, 2)지역사회 협력 강화, 3)자율적 예방활동, 4)소외계층 및 고위험군 지원, 5)응급상황 대처 및 재난 대응의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역할을 ①시설점검 및 운용성 확보, ②범죄 예방과 치안의식 제고, ③지역사회 안전 강화 전략별 중점과제로 제시함
- 충남의 안전환경 특성과 인구고령화 추세, 지역간 안전의식의 격차를 고려하여 도시, 농산어촌, 도농복합 지역별 유형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활용한 연계사업을 제안함
- 지역사회 안전강화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으로서 충남도 맞춤형 자율방범대 업무를 제안하였으나 기초제안에 그치는 한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의 지속추진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임

0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021년 7월 1일 시행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추진전략에 관련된 과제로서 지역특성과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가 치안 사무의 책무자의 하나로서 주민들의 요구나 선호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 안전구현 체계로 기능
- 이는 경찰이 지방자치 영역으로 진입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 측면에서 치안행정이 보다 주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분야로서 치안환경과 미래대응 강화를 위해 기존의 자치행정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의미함
 - 경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 수호 및 사회 공공질서 유지의 범위를 범 죄에 국한하여 협의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없음을 의미
 -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사회문제의 예방과 차단으로 확대 필요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치안유지라는 경찰 목적의 실효적 달성을 위하여 경찰과 사적 단체가 협조하는 협력치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
 - 경찰력 부족 보완의 방안으로서 여러 형태의 협력치안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범

죄 및 지역사회 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참여 필요성 대두
- 대표적인 사적 단체로서 자율방범대를 제시할 수 있음

-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범죄 피해를 스스로 막아보겠다는 의지와 부족한 경찰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953년 조직된 야경제(夜警制)에서 시작
- 의용소방대와 함께 대표적 주민자치 조직으로 1963년 방범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89년 이들을 전원 지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중단된 이후 1990년 10월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로 현재와 같은 자율방범대로 재편되었음
- 그동안 지자체 조례 외 특별한 규정이 없어 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원과 근거가 부족하였으나 2023년 4월 관련 법안의 시행으로 법률에 근거한 단체로 재정비되었음
-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사적 영역이라는 근본적 한계 내에서 경찰 등 공공 영역과의 협력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방식과 활동 영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현행 법률에서는 일반적 사항을 담고 있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 운용 방향성 확보가 요구됨
- 일상 치안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 등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바, 지자체의 관련 예산의 상이와 지원내용의 차별성을 보완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와 세부 대책이 필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 법정단체인 자율방범대의 지역 맞춤형 치안업무 발굴과 원활한 활동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치안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사회안전환경

- 안전은 위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사회발전을 통해 여러 영역에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으나 위험은 상존함
 - 복잡성이 증가하고 상호 의존성이 커질수록 상황 불확실성과 위험 범위가 확대됨
- 사회안전환경은 사회의 안전과 환경을 종합하는 개념으로 안전도시 기반과 제도를 통해 구현할 수 있음
 - 사회안전에 관련된 사람들의 행위는 객관적 위험에 대한 반응이 아닌 인식하는 주관적 위험에 대한 반응을 통해 해석 가능
- 통계청은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충남도에서도 사회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음
 - 조사항목은 화재, 구조구급, 자연재해, 교통사고, 주요범죄, 안전환경 및 지역사회 안전도와 불안감의 정도,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수준 임
- 이렇듯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안전한 거주지의 안전환경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요소를 활용하는 전략 등으로 범죄 뿐만아니라 도시 전 분야의 융합적 접근으로 발달하고 있음
 - 물리적 환경조성만으로 범죄 예방에 한계가 나타난다는 것 또한 사회적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해결요구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행정 정책학적 관점에서의 대안 제시가 필요

- 사회안전환경의 조성은 지역공동체의 안전 활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단순 물리적 기반 구축만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결속력과 지역사회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함
- 지역공동체 안전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써 대표적 주민 안전 활동인 자율방범대를, 안전을 비롯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경찰활동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활동을 통해 구현할 수 있음

2. 자율방범대 기능과 활동 근거

1) 자율 방법 활동의 정의와 기능

- 지역주민의 자율 방법 활동은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잠재적 범죄자의 검거확률을 높임으로써 잠재적 범죄를 억제하는 활동을 의미
 - 지역주민 자율방법활동에는 이웃감시, 시민순찰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율방법활동은 시민순찰에 해당하는 것
 - 특히 주민 자율순찰 활동은 한 지역의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역을 계획적으로 순찰하는 것을 의미하여 경찰의 순찰을 보완하고, 사회의 감시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 자율 방법 활동의 대표적 수행조직인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이 마을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와 상호협력 관계를 갖고 방법활동을 하는 봉사조직
 - 사회에 거주하거나 지역 기반에서 활동하는 자영업자와 같이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대원으로 편성되어 운영
- 경찰과 합동 또는 자체적으로 조를 이루어 주로 우범지역에 대한 취약시간대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정 목적의 순찰활동 수행
 - 자율방범대는 순찰중 발견되는 범죄 현장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현행범의 체포, 부녀자 안전귀가, 청소년 선도, 실종아동이나 치매노인 찾기 등의 활동 뿐만아니라 주요행사 질서유지 등 기타 경찰업무에 대한 지원·협력 역할 수행

2) 자율방법활동의 역사와 발전

- 우리나라의 자율방법활동은 1963년경 지역주민들이 범죄피해를 스스로 막아 보겠다는 의지와 부족한 경찰력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율조직됨
- 초기에는 조직적인 체계가 없이 동네마다 반장을 중심으로 2~3명씩 짝을

지어 24:00시부터 통금이 끝나는 04:00시까지 순찰을 주로 실시

- 1970년대부터 산업화와 도시로의 이농현상으로 공동체 활동에 대한 존속 자체에 한계를 느낀 이후 각 지역별로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1990년 10월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각 지역별로 활동하던 조직을 파출소별로 재정비하고 인원도 확충하는 등 조직이 체계화되고 활성화하였음
- 1996년에는 ‘자율방범대 관리 지침’이 마련되었으며, 조직의 명칭을 ‘○○파출소 자율방범대’로 통일하면서 조직을 재정비한 바 있음
 - 그동안 경찰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자율방범대가 순수한 자율단체로 기능해야 한다는 취지에 있었다 하나 2003년 8월부터 경찰이 파출소에서 지구대 체제로 개편되면서, 파출소별로 1개씩 구성되었던 자율방범대는 지구대별로 수 개가 구성되기도 하였으며 2023년 관련 법이 제정·시행 되었음

3) 법·제도적 근거

-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자율방범대법)에 법적 근거를 둠
 -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정 단체의 지위를 얻게 됨
 - 법률 제정 이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에 근거하였으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았음
-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단위에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법 제3조제1항)
 - 다만, 인구와 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음
- 자율방범대는 법률에 근거하는 법정단체이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하는 단체임(법 제2조제1호)
 - 따라서 자율방범대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4조제1항)

○ 자율방범대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 둘째, 청소년 선도 및 보호
- 셋째,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넷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자율방범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음

- 그동안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역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초소운영비와 야식비, 피복비, 순찰차량 유지비 등의 지원을 받음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방범대 예산 규모의 편차가 크거나 의용소방대에 비해 1인당 지원 경비가 현저하게 낮고, 자율방범대원들이 사비를 들이는 등 열악한 재정여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방범대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됨
- 자율방범대법 제1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와 보험 가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¹⁾

○ 자율방범대 조직은 자율방범대법 제3조에 따라 대장과 부대장, 총무 및 대원으로 구성됨

- 자율방범대의 정원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10명 이상 70명 이하로 하되, 자율방범대장이 요청하는 경우 70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음

1) 하지만 자율방범대법 제정 이후 예산 지원이나 활동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채 엄격한 자격 요건 규정으로 인한 각종 서류 제출 등 가입 절차만 복잡해졌다는 의견도 제기됨(강원일보(2024.03.12.), “‘치안 파수꾼’ 자율방범대원 1년새 1천명 이탈... 이유는?”)

- 읍·면·동 단위에서 설치된 자율방범대 간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 등을 위해 연합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데, 시·군·구 단위에서는 시·군·구 자율방범연합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로는 시·도 자율방범연합회, 그리고 전국 단위로는 자율방범중앙회를 각각 1개씩 둘 수 있음
- 2022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4,194개의 자율방범대에서 99,394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음²⁾

2) 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203.jsp>); 한 언론기사에서는 2023년 전국 자율방범대원이 총 8만 7천여 명으로 감소했다고 제시함(<https://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1427>)

3. 자율방범대의 기본역할과 한계

- 2022년 4월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 가능의 토대 형성의 의의
 -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이중적 관리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효과성을 담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관리주체에 대한 시도경찰청장 등으로의 일원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
-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복장, 장비 구입, 교육 훈련, 포항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함으로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한 측면이 인정됨
 - 자율방범대 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가진 지역 봉사단체가 됨에 따라 지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예산 지원으로 인해 대원의 자긍심 향상 등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점에서는 긍정적
 - 그러나 예산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활동과 관리에 관한 주체를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닌 시도경찰청으로의 일원화가 지자체 행정 복지 안전망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행정서비스 효율화 저해 및 주민 참여의 중복성 한계도 나타난다 할 것임
- 따라서 주민간 유대감 강화와 사회통제 역할 수행 외에 지역사회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무를 조력하기 위한 민간단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 설정에 대한 목표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단순히 범죄예방을 통한 경찰과 지역사회 간 협력 치안의 사례 기능이 아닌 지역 봉사단체로서 각종 예산 지원을 받는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읍장 면장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역할 설계 기초가 되는 활동 영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지방선거 개입 가능성을 염두하며 법 제7조 제4호 삭제 검토를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구체적 활동 제시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마련에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할 필요가 있음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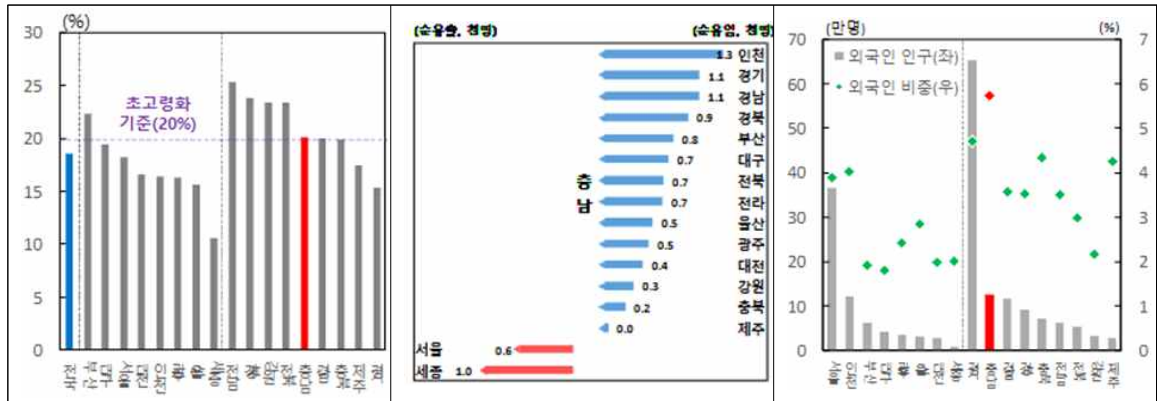
충청남도 안전환경 특성과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1. 안전환경 특성

1) 인구구조

- 충청남도는 지리적·경제적 특성에 따라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뉘며, 두 권역은 인구구조와 경제활동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냄
 - 북부권은 도시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남부권은 농업 중심 지역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두드러짐
- 2023년 말 충청남도의 고령화율은 20.1%로 전국 평균(18.6%)을 상회하며, 초고령 기준(20%)을 넘어서고 있음
 - 이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에서는 6번째로 높은 수준
- 산업단지가 위치한 북부권의 고령화율은 14.6%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농어촌 지역인 남부권의 고령화율은 30.0%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도내 권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충청남도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세종시에 이어 순유입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임
 - 충청남도로 유입되는 인구를 광역 시·도별로 보면,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순유입 되었음
- 2023년 말 충청남도 외국인 비중은 5.7%로 전국 평균(3.7%)을 크게 상회
 - 충청남도 외국인 인구는 12.7만명으로 광역 시·도 중 세 번째로 많고, 도 지역에서

는 경기도(65.3만명) 다음으로 많은 수준



[그림 1] 고령화율³⁾

[그림 2] 순유입인구
(2019-2023)

[그림 3] 외국인 현황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2024)

2) 안전환경에 대한 인식

- 2024 충남사회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 사회안전에 대해 38.5%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1.3%는 불안하다고 인식함
 - 사회안전 가운데 자연재해, 붕괴 폭발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한 반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인식은 5.11 점으로 가장 낮음
- 2022년 충남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8,164건으로, 전년(8,423건) 대비 259건 감소하였으며, 사망자 수는 35명 감소, 부상자 수는 233명 감소함
 - 인구 10만명당 부상자 수(548.8명)는 전년 대비 0.8명 감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10.6명)은 전년대비 1.3명 감소
 - 자동차 1만대당 발생 건수는 청양군(86.4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예산군(22.6명)이 가장 높음
- 교통사고 부문에 있어서는 충남도는 2010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부문에 있어

3) 65세 이상 인구, 2023년 말 기준

안전하다는 인식이 하락하였으며, 특히 청양군의 경우 안전하다는 인식이 전년 대비 26.6%가 감소

○ 2022년 주요범죄 발생 건수는 5만 9,196건으로, 전년 대비 4,973건 증가함

– 충남 주요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발생 건수(148만 2,433건)의 4.0% 이며, 특히, 지능범죄 발생 건수가 1만 6,78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범죄(1만 2,636건), 폭력범죄(8,846건) 등의 순

○ 범죄 분야에서는 북부권역에서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상승하고 있으나 다른 권역에서는 전년 대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안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지역별로 크게 나타남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당진시, 청양군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 안전하다는 인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별 환경 및 산업, 인구 특성을 고려한 주민 참여활동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2022년 충남 전체 검거인원 중 소년범죄자 비율은 6.0%로 전년 대비 1.3%p 증가함

– 소년범죄자 절도범 비율은 전년 대비 8.8%p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특별법범 비율은 6.3%p 감소하였음에도 충남 소년범죄자 특별법범 비율이 35.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절도범(28.5%), 강력범(9.8%), 폭력범(7.3%) 등의 순

○ 주요범죄 검거율은 75.9%로 전년(78.4%) 대비 2.5%p 감소

– 주요범죄 검거율은 전국(76.5%) 대비 0.6%p 낮으며, 교통범죄 검거율이 9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범죄(93.1%), 강력범죄(92.8%) 등의 순임

○ 지역사회 안전 중 ‘치안유지 수준’에 대한 안전 인식이 41.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생활안전 확보 수준’(39.1%), ‘보행 안전수준’(37.7%)의 순

– ‘치안유지 수준’ 안전 인식은 시군별로 계룡시(66.4%), 연령별로는 60세 이상(47.3%), 학력별로 초졸 이하(48.7%), 직업별로 농어업(48.8%)에서 높음

○ 가장 불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로 ‘공원, 놀이터, 공터’가 42.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버스정류소 주변’(20.4%), ‘학교 주변’(14.4%), ‘집 근처’(12.8%) 등의 순임

- ‘공원, 놀이터, 공터’ 응답은 시군별로 계룡시(56.7%), 연령별로는 40대(48.3%),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별로 사무(48.6%)에서 높음
- 치안유지 수준에 대한 충남도민의 전반적인 인식은 보통(43.8%)이라는 응답이 안전(41.7%)하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권역별에서도 금강권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시군별로는 계룡시(66.4%), 서천군(58.9%), 금산군(55.2%), 부여군(51.7%), 아산시(51.4%) 등의 순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양군(29.6%), 당진시(34.2%), 공주시(34.8%), 서산시(34.9%)에서는 낮게 나타나는 등 지역간 편차가 큼
-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별로는 기타(46.7%), 단독주택(46.0%), 아파트(38.8%), 연립/다세대주택(38.2%)의 순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읍면동별로는 면부(48.0%)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보통이라는 인식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동부와 읍부에서는 보통이라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남
 - 농촌(46.7%)과 어촌(50.3%)의 경우 안전하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도시의 경우 안전(39.2%)하다는 응답보다 보통(45.2%)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 도시권에 거주할수록 안전하다는 인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산업유형과 인구 구조를 반영한 주민 만족도 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됨

2.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1) 구성 현황

- 자율방범대법, 도 자율방범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 구성 : 1개 연합회, 17개 연합대, 292개 지대, 6393명('24.10기준)
- 역할 :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

2) 지원 현황

- 도 연합회 운영 및 시군 연합대 연계를 위한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하여
 - 도비예산 40,000천원을 지원(2025년 기준)하며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회의운영비 등에 활용
 - 기능보강에 29,320천원, 활동지원에 50,000천원, 시군 자율방범재 지원과 도경찰청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를 위한 298,756천원을 포함
 - 도비 1,433,842천원 및 시군비 2,370,121천원을 포함하여 3,803,963천원 지원
 - ('24년) 피복(29억), 초소(8억), 순찰차(11억), 장비(1.1억) 등 총 56억 지원
 - ('25년) 피복(10억), 초소(12억), 순찰차(9억) 등 총 38억 지원

〈표 1〉 2025년 자율방범대 및 관련 예산 계획 수립 현황

구 분			예 산 액			비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3,803,963	1,433,842	2,370,121	
도 연 합 회	충남자율방범연합회 활동 지원	캠페인, 워크숍	50,000	50,000	0	
	충남자율방범연합회 운영 지원	운영비(임차료 등)	40,000	40,000	0	
	충남자율방범연합회 기능보강	집기 구입, 공사	29,320	29,320	0	

구 분			예 산 액			비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3,803,963	1,433,842	2,370,121	
시 군 자 율 방 범 대	충남자율방범연합회 도 체육대회 지원	결의대회 및 체육대회 개최	66,667	20,000	46,667	청양군
	시군 자율방범대 피복 지원	우비, 활동화, 안전조끼 구입	1,078,920	323,676	755,244	15개 시군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	초소 환경개선, 순찰차구입	2,077,300	623,190	1,454,110	13개 시군
	시군 방범협력단체 활동 지원	우비, 안전조끼, 방한화 구입	43,000	12,900	30,100	논산
	시군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워크숍	워크숍	120,000	36,000	84,000	공주, 보령, 홍성
도 경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	방범협력단체 간담회 등 운영비, 직무교육, 안전방한용품 구입 등	298,756	298,756	0	재배정

3) 지원내용

○ 충남자율방범연합회 운영 지원

- 도 연합회 원활한 운영과 시군 연합대 연계를 위한 운영비 지원하며, 자율방범대 법, 도 자율방범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회의 운영비 등에 활용

○ 충남자율방범연합회 활동 지원

- 도 자율방범연합회 범죄예방 캠페인 및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 범죄예방 캠페인(17개 연합대), 역량강화 워크숍(1회)

○ 충남자율방범연합회 기능보강

- 도 자율방범연합회 사무실 집기비품 교체 및 리모델링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 충남자율방범연합회 체육대회 지원

- 범죄예방 결의 및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통한 도내 자율방범대 사기진작

및 교류 활성화

○ 시군 자율방범대 피복 지원

- 자율방범대 복장 고시에 따른 통일된 피복 지원
- 우비, 활동화, 안전조끼 지원

○ 시군 방범협력단체 피복 지원(논산시)

- 논산시 군 방범협력단체(자율방범대, 시민경찰) 피복 지원
- 자율방범대 우비, 안전조끼 지원
- 시민경찰 안전방한화 지원

○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초소·차량)

- 시군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개선 및 순찰차 구입 지원
- 초소 환경개선(집기교체, 리모델링 공사) 및 순찰차 구입을 위하여 도비 시군비 투입

○ 시군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워크숍

- 시군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지원
- 자율방범대 업무 이관(자치행정과 →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라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에 따른 숙박비 등 지원

○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

-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시민경찰 등 협력단체 운영 지원을 통한 주민참여 방범활동 활성화
-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시민경찰 등 협력단체 운영 지원
- 방범협력단체 운영 등(107,500천원)
-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시민경찰 간담회·캠페인·순찰 등 지원, 방범대 신분증, 위촉장 제작
 - * '24. 9월 기준 : 간담회 388회, 순찰 16,430회
- 자율방범대 직무교육(78,000천원) : 쏠 대원 年12시간 직무교육 이수 의무, 교육 효과성 증대와 현장부담 감소를 위해 온라인 교육 추진
- 방범협력단체 안전·방한용품 구입(85,800천원)
- 안전용품 : 야광조끼, 우의, 신호봉, LED후레쉬, 장갑, 모자, 호각
- 방한용품 : 방한모자, 방한장갑, 귀마개

- 경찰실습학점제 운영비(1,000천원) : 관내 경찰학과가 있는 경찰서 중 희망서 운영, 경찰학과 학생 대상 경찰실무 교과목 편성·교재 제작비 등 지원
- 시민경찰학교 운영(26,456천원) : 15개서 수요조사를 거쳐 희망서 운영, 30명 내외 2주간(10일) 교육 진행, 강사료·교재·실습장비 등 지원

04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사회 안전관리 현안과 추진과제

1. 치안정책 변화와 정책현안 주요 이슈

- 2025년 치안환경 전망에 대한 경찰대학의 치안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0대 치안이슈로 다음을 선정

〈2024 10대 치안이슈〉

- ① 텔레그램 이용 딥페이크 유포 사건
- ② 음주운전 뒤 '술타기(음주측정 방해)' 처벌
- ③ 서울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 ④ 배터리 대형 화재사건
- ⑤ 아동학대 사망사건(태권도장 매트 살인, 제부도 영아시신 유기)
- ⑥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 ⑦ SNS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
- ⑧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살인' 계속 발생
- ⑨ 사이버도박 청소년 가담 증가
- ⑩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

-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슈가 치안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서울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묻지마 살인, 대형화재 사건 등이 국민적 불안을 가중
- 이미 전통적 범죄예방 활동 이외의 사회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측면으로 전환 하고 있음

1) 2025년 치안전망

- 지역사회 치안에 관련이 높은 생활안전과 사회안전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치안환경을 전망할 때 사회적 관점에서 국내 환경은 개인의 취향과 웰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일상의 행복과 평범함이 새로운 사회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

〈표 2〉 치안환경의 변화요인 STEEP 분석

구분	변화 흐름	핵심 주제
사회 (Social)	• 개인의 취향과 웰빙 중시, 일상의 소소한 행복추구 • 평범함과 안정이 새로운 사회적 기준으로 제시	• 개인화와 안전중심 사회
기술 (Technological)	• 인간 삶의 중심으로 발전하는 기술 • 인공지능, 로봇, IoT 등에 기반한 인간의 능력 확장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 혁신의 필요	• 인간 중심의 기술 진화
환경 (Environmental)	• 탄소 배출 제로, 재생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 • 정부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가 주요 과제로 대두	• 지속 가능한 환경 혁신
정치 (Political)	• 공생과 상생을 중시하는 정책이 필요 •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	• 협력과 규제
경제 (Economic)	• 금융 안정 및 자산 양극화 해결이 주요 과제로 대두 • 저성장 극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 질서와 신산업 등 경제 회복 모색	• 혁신과 구조적 대응

자료: 경찰대학 치안연구소(2024)

- 경제적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금융 안정성, 저성장 극복, 양극화 해소와 같은 과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환경 관점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이 주요 과제로 부상

2) 생활안전 분야

- 112긴급 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25년에는 112신고처리법의 시행에 따른 허위신고, 예상치 못했던 재난 등에 대한 비긴급신고(코드3)에 대한

대응수위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전통적 성범죄는 다소 줄어든 반면 통신매체를 이용하거나 교제폭력 스토킹 등 범죄 증가가 지속
- 학교폭력 범죄의 증가세가 유지되며 학교폭력 유형 중 협박, 모욕·명예훼손, 강요 등 심리적 폭력 증가 예상
 - 학교폭력은 '24년 9월까지 14,710건 발생, 전년 동기간 대비 28.7% 증가, 특히 협박, 모욕·명예훼손, 강요, 재물손괴 등 '기타'로 분류된 학교폭력의 증가율은 2023년 9월 대비 47.4%로 매우 높게 증가하여 2025년에도 이러한 증가세 지속 전망됨
- 사회적 관심의 고조, 무관용 대응 등으로 '24년 9월까지의 전년 동기간 대비 신고 건수는 1.2%, 송치 건수는 6.1% 감소, 2025년도에도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 건수는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
 - 학대 유형 중 정서학대, 성학대는 소폭 증가 전망

3) 사회안정분야

- 2024년 긴장 국면 고조, 다양한 집회시위 증가 전망
 - '24년은 진보 시민단체들은 주로 정책 반대집회를 전개하였고 보수 시민단체의 맞대응 집회 등으로 인해 집회시위 증가 추세
- 집회시위 개최 횟수는 '23년 79,395회, '24년 9월 63,874회
 - '24년 확정기 소음 기준(집시법 시행령 제14조)을 강화한 것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조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
-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집시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금지했던 '22년 경찰조치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금지 장소가 아니라며 '24년 대법원판례 확정(4건) 등 법적 공방 지속
 - '22년 용산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다중운집 인과사고가 재난 개념에 포함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하여 경찰청이 행안부와 함께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

- 다중주택 인파관리에 대한 경찰의 법적 의무가 규정됨으로써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관련 실행 매뉴얼 정비, 현장 대응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개별 경찰관의 교육·훈련이 중요

4) 자율방범대 업무의 시사점

- 2025년 치안 환경에서 변화하는 주요 트렌드와 도전 과제를 고려하여 치안 정책 변화와 전망에 근거하여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구상하면 기술적 대응, 예방 중심 활동, 지역사회 협력,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법적 권한의 강화 등 분야에서 기여가 가능

① 스마트 치안 기술의 활용

- 스마트 기술이 치안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자율방범대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CCTV 모니터링, 드론 순찰,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 및 상황 공유 등 효율적인 치안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음
- 자율방범대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 패턴 분석, 고위험 지역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받아 예방적 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찰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음

② 지역사회 협력 강화

-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 지역사회 치안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자율방범대는 주민들에게 치안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자율적 예방 활동

-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경찰과 협력하여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여지가 확대 되었음
 - 자율방범대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과 신고를 신속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율방범대의 법적 권한이 명확히 정의되고, 경찰과의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자율방범대는 범죄 발생 후 대응보다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역할 중심의 단체이며, 관련 활동을 수행함
 -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방범 캠페인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치안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 자율방범대는 주민들과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실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등 제반 문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함

④ 소외 계층 및 고위험군 지원

- 2025년은 물론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고위험군에 대한 치안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자율방범대는 고령자, 어린이, 여성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와 연계하여 행정 서비스 제공의 효율화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자율방범대는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수행 가능
 - 이를 위해 정신건강, 상담, 긴급 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정신건강 및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개입에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⑤ 응급 상황 대처 및 재난 대응

- 지역사회 안전 강화 측면에서 자율방범대는 자연 재해나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역할을 할 수 있음

- 특히, 재난 대비 및 대응 체계에 있어 지자체 역할이 강조되고, 특히 읍면동 단위의 현장 최일선의 신속한 대처가 중요해진다는 점에서 자율방범대는 주민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이를 위해 자율방범대는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으며, 새로운 치안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임

2. 지역사회 안전관리를 위한 자율방범대 업무 개발

1) 지역중심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향

- 공동체 기반에 따라 주민 참여의 형태와 업무영역 및 대상을 차별화 하여 세부활동 범위를 조정
 - 충청남도는 지역특성과 인구환경 여건에 따라 그 활동 범위와 주민참여의 정도 간 차이가 크고, 특히 사회경제적 동질성이 약하고 거주기간이 짧은 대도시 권역과 농산어촌 간 편차가 자율방범대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운영효율화와 예산 중복 가능성을 배제하여 기관 운영 부서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 문제 해결 중심의 협력 강화
 - 고령화 가속화 추세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의 각종 직능단체 참여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과 주민자치, 봉사, 안전, 새마을 관련 단체의 중복에 따른 유사활동 수행의 한계 보완
- 주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창출 연계

2)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방향	추진전략	중점과제
스마트 치안기술 대응	시설 점검 및 운용성 확보	①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시설 설치지역 발굴
		② 드론순찰
		③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취약지역 신고
지역사회 협력 강화		④ 스마트 안부확인 장치(기기) 전달
		⑤ 가로조명, 보안등, 안전벨 설치지역 발굴
		⑥ ICT 기반 범죄예방 안심귀가서비스 이용 홍보
자율적 예방활동	범죄예방과 치안익식 제고	① 고위험지역 순찰
		②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학교폭력 예방교육
		③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전달
		④ 방법, 음주운전, 안전벨트, 안전모 착용 캠페인 실시
		⑤ 범죄 및 사고대처, 위험회피 교육
		⑥ 무인점포 절도예방 활동
소외계층 및 고위험군 지원	지역사회 안전 강화	① 안전 취약지역 발굴 및 마을안전지도 만들기
		② 로드킬, 야생동물 출현 신고 및 들개 물림 사고예방 교육
		③ 학대예방 및 인식개선 캠페인
		④ 실종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등록제 홍보
		⑤ 이륜차 사고 자동신고 시스템 센서 설치
		⑥ 산불 예방교육, 영농부산물 파쇄, 공동소각 지원
응급상황대처 및 재난 대응		

(전략 1) 시설점검 및 운용성 확보

①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시설 설치지역 발굴

- 목표: 사고 다발지역의 위험요소 제거 및 교통사고 예방
- 내용: 자율방범대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교통표지판, 과속방지턱, 신호등 등 교통시설의 설치 필요지역을 발굴

② 드론순찰

- 목표: 넓은 지역의 효율적인 감시
- 내용: 드론을 활용한 범죄 취약지나 인적이 드문 지역의 정기적 순찰 및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및 위험상황 신고

③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취약지역 신고

- 목표: 주민 참여를 통한 취약지역 정보 확보
- 내용: 안전신문고 앱 등을 활용해 자율방범대원 또는 주민이 위험 지역을 신고하고, 자율방범대 역할 범위 내에서 가능한 후속조치도 실시

④ 스마트 안부확인 장치(기기) 전달

- 목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
- 내용: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기를 보급하여 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을 경우 보호자나 방범대에 알림 전송

⑤ 가로조명, 보안등, 안전벨 설치지역 발굴

- 목표: 야간 범죄 예방 및 주민 불안감 해소
- 내용: 골목길, 공원 등 어두운 지역을 중심으로 보안등이나 비상벨 설치 필요지를 조사하여 지자체에 제안

⑥ ICT 기반 범죄예방 안심귀가서비스 이용 홍보

- 목표: 귀가길 안전 확보 및 서비스 이용 활성화
- 내용: 자율방범대가 앱이나 웹 기반 안심귀가서비스(위치공유, CCTV 연동 등)를 주민에게 적극 홍보

(전략 2) 범죄예방과 치안의식 제고

① 고위험지역 순찰

- 목표: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치안 확보
- 내용: 우범지역, 유흥가, 학교 주변 등 고위험 지역을 자율방범대가 집중 순찰

②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학교폭력 예방교육

- 목표: 신종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 내용: 주민 대상 범죄유형별 예방 교육 실시, 청소년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③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전달

- 목표: 주거 취약계층의 범죄예방
- 내용: 문열림감지기, 창문 잠금장치, 호신용 스프레이 등이 포함된 안심홈세트를 배부

④ 방법, 음주운전, 안전벨트, 안전모 착용 캠페인 실시

- 목표: 생활 안전문화 정착
- 내용: 거리, 학교, 행사장 등에서 안전수칙 관련 캠페인 실시 및 리플렛 배포

⑤ 범죄 및 사고대처, 위험회피 교육

- 목표: 위기 대응능력 향상
- 내용: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과 교육으로 범죄 대처 및 피난 요령 습득

⑥ 무인점포 절도예방 활동

- 목표: 무인점포 범죄 예방
- 내용: 무인편의점 등에서의 순찰 강화, CCTV 작동 확인 및 사각지대 점검

(전략 3) 지역사회 안전 강화

① 안전 취약지역 발굴 및 마을안전지도

- 목표: 마을 단위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 내용: 자율방범대가 마을을 돌며 위험지역 표시, 마을주민과 협력해 안전지도를 제작·배포

② 로드킬, 야생동물 출연신고 및 들개물림 사고 예방교육

- 목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
- 내용: 야생동물 출현 지역 순찰 및 주민 대상 주의사항 교육, 로드킬 다발 구간 신고

③ 학대예방 및 인식개선 캠페인

- 목표: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 방지
- 내용: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보급

④ 실종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등록제 홍보

- 목표: 실종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
- 내용: 아동지문 사전등록제, 인식표 배부 등 예방제도 홍보 및 등록 활동 지원

⑤ 이륜차 사고 자동신고 시스템 센서 설치

- 목표: 이륜차 사고 시 신속한 구조
- 내용: 센서가 충격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119나 보호자에게 사고 발생 알림 전송

⑥ 산불 예방교육, 영농부산물 파쇄, 공동소각

- 목표: 산불 및 환경오염 예방
- 내용: 봄·가을철 산불위험 시기 교육 실시, 농촌 지역에서 부산물 파쇄를 통한 불법소각 방지

3) 지역공동체 기반에 따른 시군자율방법대 별 업무 배분

- 업무의 영역과 대상에 따라 주민참여 방식 차별화가 요구되며 지역공동체의 기반형성 정도에 따라 활동 내용 단계 구분
- 주민모임의 장 마련 및 조직 결성 단계에서는 안전교육과 리더 육성, 홍보 및 행사 중심으로 운영 하며 지역사회 위해요인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비롯한 순찰(둘러보기), 안전지도 만들기 등 추진
- 감시 순찰활동은 취약인구인 독거노인, 아동, 여성 등 돌봄 서비스와 연계
- 시설물 안전점검과 진단활동은 안전용품의 보급과 안전관리 활동에 수반되는 장비를 연계하여 모니터링하고 공공 부문의 유지관리에 조력

〈표 3〉 공동체 기반에 따른 주민주도 활동 구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지역 공동체 기반	지역공동체 기반이 미약한 경우	지역공동체 기반이 형성된 경우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경우
주민 참여 형태	여건조성 및 사업발굴(인큐베이팅)	민관파트너십,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주민 중심의 자율적 참여
주요 활동	주민모임 활성화 안전교육 및 홍보 지역 안전리더 발굴·육성 안전위해요인 조사 및 발굴	성공사례 공유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 협력 비용이 적게 들거나 사업추진이 비교적 용이한 소규모 핵심사업 추진	안전관련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업 추진 안전 이외의 지역 이슈와 결합한 사업 추진 보다 광범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자료: 행정안전부(2024)

- 범죄, 교통, 생활안전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장소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시와 농산어촌, 도농복합지로 구분할 수 있음
 - 활동분야는 안전의식개선과 물리적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에 기여하는 것을 토대로 구조개선 등 물리적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점을 발굴함
 - 대상에 따라 피해가 가중되는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관할 지역 내 서비스 전달기능 수행

(유형 1) 도시형

- 인구 30만 이상 지역의 원도심,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밀집 등 주거지 중심 안전환경 개선 및 범죄, 사고 예방 순찰활동 가능
-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시설 중심 사고예방 캠페인 및 인프라 점검 참여활동 수행

-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 인구밀집 지역 안전 치안활동, 자살위험 지역 대상 자택 방문 캠페인
- 반지하·옥탑 등 주거취약 가구 안전점검 및 수리
- 방화문 점검
- 주차공간 정비 활동
- 민·관·경 범죄 예방 대책 논의 및 공유
- 상시 순찰요원 배치 범죄예방 예찰활동, 위험요소 점검 및 대응
- 범죄예방 현장 컨설팅(전문가, 경찰, 구청 유관부서 합동)
- 한부모 모자 가족 지원, 범죄 피해 예방 및 응급상황 신속 알림
-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전달
-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 캠페인
- 보행환경 개선 필요지역 발굴
- 교통시설 설치 지역 발굴
- 무단횡단 많은지역, 사고 예방 캠페인
- 안전순찰, 대학가 인근 학생 계도, 범죄 사각지대 발굴(보안등 신설지역 발굴)
- 조도 확보 가로등 유지관리
- 배달 종사자 이륜차 점검, 이륜차 안전신고 포상제
- 이륜차 안전운행 캠페인
- 전동 킥보드 안전교육 및 캠페인
- 쪽방촌 방역 및 소독
- 무인점포 절도 예방 활동

(유형 2) 농산어촌형

- 인구기준 10만 이하 주요 산업군이 농축수산업으로 분류되며, 특히 고령화율이 높고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
- 안전취약계층인 노인, 외국인 등 복지관점의 사고 예방과 조기신고 활동 수행

- 이륜차 사고 자동신고 시스템 센서 설치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 농축산물 절도 예방 단속 및 교육
- 산불 예방교육, 영농부산물 파쇄, 공동소각
- 농약사고 예방교육
- 폭염·안전키트 방문 전달 및 취약계층 안부 확인
- 경로당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경로당 안전인증 고독사 예방, 사회적 고립 사각 지대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마을회관 범죄, 교통, 화재 안전 공동교육 실시
- 보행환경 개선 필요지역 발굴
- 교통시설 설치 지역 발굴
- 조도 확보 가로등 유지관리

(유형 3) 도농복합형

- 인구 30만 이하 지역으로 산업군이 혼재되어 있으며,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적 취약성을 공유
- 안전취약계층이 돌봄 대상이면서 동시에 안전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자로 활동 가능

- 인구밀집 지역 안전 치안활동
- 지역 축제장 혼잡 인파 관리 지원
-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 음주운전, 안전벨트 착용, 이륜차 안전모 착용 캠페인
- 자전거 사고예방 캠페인
- 무인점포 절도 예방 활동
- 어린이 개물림 사고 예방 교육
- 성묘별초객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 야생동물 방지용 전기울타리 점검
-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대상지발굴
- 안심 승하차존 구축
- 가방반사판 부착 지원
- 등하굣길 엄마손 캠페인
- 투명우산 배부
- 어린이집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수요조사
-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학부모, 지구대 협업)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골목길 안심귀가 우범지역 발굴
- ICT 기반 범죄예방 안심귀가서비스 이용 홍보
- 안전귀가길 동행 활동
- 아동안전지킴이집 홍보
- 장애인 교통안전교육
- 장애인 전동휠체어 야광반사지 부착
- 외국인 근로자 교통안전 교육
- 안전신문고 외국어 리플렛 배포

05 결론 및 제언

1) 연구요약

- 본 연구는 충남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율방범대 업무를 제안함으로써 활동 모델을 제시하고 정책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2023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자율방범대가 법정 봉사조직으로 재편
 - 충청남도는 지역 간 안전 인식 격차와 고령화, 외국인 비중 증가 등 복합적 안전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자율방범대는 법정단체로서 자율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치안의 보완 역할을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
 - 범죄예방, 청소년 보호, 지자체장 요청 업무 등 수행 가능
 - 운영 피복, 장비 등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예산 지원 가능
- 2025년 기준 도비 및 시군비를 포함한 약 3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장비지원·초소 개선·워크숍 운영 등 지원활동이 이루어짐
- 변화하는 치안 환경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스마트 치안기술, 주민참여형 예방활동, 소외계층 지원, 응급상황 대응 등 5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활동영역을 구조화하였음

전략 분야	주요 과제 예시
스마트 치안기술 대응	드론 순찰, 스마트 안부확인기기, 안전신문고 활용
지역사회 협력 강화	범죄예방 교육, 귀갓길 안전서비스, 주민참여 순찰
자율적 예방활동 강화	고위험지역 순찰, 안심홈세트 제공,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등
소외계층 및 고위험군 지원	독거노인, 아동, 여성 대상 안전활동 및 위기대응 교육
응급 및 재난 대응	산불예방, 실종아동 사전등록 홍보, 재난 초기 대응 훈련 등

- 충남 지역 특성 반영 전략의 제시와 동시에 도시형, 농산어촌형, 도농복합형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업무가 요구됨에 따라 각 유형별로 세부활동 안을 구체화하였음
 - 도시형: 아파트·상업지역 중심 순찰, 범죄예방 캠페인, 1인 가구 안심활동 등
 - 농산어촌형: 고령자, 외국인 대상 안전점검, 농기계사고 예방교육 등
 - 도농복합형: 지역축제 혼잡관리, 보이스피싱 예방, 어린이·장애인 대상 교통안전 활동 등

2) 정책 제언

- 자율방범대 법 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역할과 권한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부족하며, 지자체장의 요청 활동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한계
- 또한 도내 시군별 재정지원 수준의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자율방범대 운영 여건에도 차이 발생
- 그동안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정량적 통계가 수집되지 않고 예방효과와 주민인식 개선 등 정성적 성과를 평가하기에도 미흡한 실정을 반영하여 정성적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체감도,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조사가 축적되어야 할 것임
- 향후 자율방범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중심의 역할 세분화가 필수적
 - 지역 특성 반영한 활동 매뉴얼 구체화
 - 정치적 중립성 확보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성과기반 예산 배분 체계 도입을 통해 활동의 성과를 추적하고 이를 통한 시군별 예산 활용의 차별화를 도모
 - 도 차원의 표준화된 예산 가이드 마련
 - 활동성과와 예산의 연계성 강화
- ICT 치안기술 도입 활성화를 통하여 기존에 주민 참여 활동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기술수용성과 전문화된 교육체계를 정비
 - 스마트 장비 도입과 현장 중심 실습 교육 병행
 -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 자율방범대 통합 거버넌스 운영을 통하여 지역에 산재한 유사기능 단체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 개편
 - 주민자치·새마을회 등 유사 단체와 협력 모델 구축
 - 지역사회 기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지속적 사업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성과관리 및 평가 체계 구축
 - 안전지표 개선도, 주민참여율, 활동지속성 등을 포함한 평가 프레임 개발
- 충남도 맞춤형 자율방범대 운영 모델을 지속가능한 지역 안전관리체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지원 확대와 함께 자율방범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통합정보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4). 치안전망 2025. 서울: 범신사.
- 김용훈. (2023). 안전한 지역사회 공동체 치안 구축을 위한 경찰-자율방범대 협력방안. 법학논고, 80. 93-125.
- 박재희, 전대욱, 최인수. (2021). 자치경찰 사무의 상대적 비중 및 중요도 분석. 지방행정연구, 35(4). 145-162.
- 오윤경. (2014). 사회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인프라 및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이진경. (2016). 지역사회 자율방범대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창호. (2022). 「자율방범대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1(5), 165-190.
- 정연대. (2023). 코로나19 전후 치안수요의 변화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37(2). 39-72.
- 조성호, 이행준, 조승현. (2020). 자치경찰 분야의 치안 행정수요 분석에 관한 이론적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 지역정책연구, 31(2), 177-220.
- 충청남도. (2023). 충남사회지표 조사 및 분석.
-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2024). 충남지역 지방소멸의 주요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 행정안전부. (2024). 읍면동 안전기능 강화 평가 및 확산방안.